



바른사회시민회의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

@FactBrief

CUBS FACT BRIEF | 2016년 5월 17일 | 발행처 바른사회시민회의 | 발행인 전삼현 | www.cubs.or.kr

<FactBrief 17>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될 법안 시리즈 ②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경제활성화 관련 주요 법안

이옥남·김도연(바른사회시민회의)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5월 19일 예정이다.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쟁점 법안 및 민생법안들은 최소한 5월 13일까지는 상임위를 통과해야 한다. 국회법 59조에 의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은 5일간의 기간을 거친 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사안에 따라 여야 합의가 있으면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 5일 숙려기간이란 상임위를 통과한 법이 법사위에 회부된 이후 전체 회의에 상정되기 전 최소한의 검토시간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19대 국회 각 상임위는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상황이며, 쟁점 법안뿐만 아니라 무쟁점 법안조차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5월 1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와 함께 ‘임기만료폐기’로 자동처리 될 예정이다. 안보 법안에 이어 제19대 국회에서 폐기될 예정인 민생·경제활성화 관련 주요 법안들을 상임위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2012년에 발의되어 4년 가까이 계류되어 있다. 한국의 현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수출 보다 서비스산업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은 절실하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었던 법이다. 규제를 풀어 지방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의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여야 이견이 거의 없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지지하였다. 그러나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개회가 순조롭지 못한 상황이라 법안의 처리 가능성은 희박하다(【표 1】 참조).

【표 1】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주요법안

(기준: 2016. 05)

연번	법안명	발의/제안일	발의/제안자	내용	법안처리상태
1	규제프리존특별법	2016.03.24	강석훈	전국 14개 시도에 지역전략산업 지정, 세제 및 재정지원	기획재정위 계류(상정)

연번	법안명	발의/제안일	발의/제안자	내용	법안처리상태
2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2012.07.20.	정부	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세 제연구 개발 지원 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계류

2.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관련 법안은 ‘중재산업진흥법’, ‘스토킹방지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있다. 정부안으로 발의된 중재산업진흥법의 주요골자는 국가의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중재산업 진흥 기반의 조성국 제중재 유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중재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중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중재는 기업들 간의 국제 분쟁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상가권리금, 주택임대차, 대여금, 보험, 보증, 인테리어 관련 분쟁, 층간 소음 등 이웃 간 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

‘스토킹방지법’은 오랜 전부터 사회적 문제가 되어온 있는 연인 간 데이트 폭력을 사전에 차단하는 취지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18년째 국회 계류 중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경우, 최근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인한 재심 무죄판결이 예외 없이 공시돼 피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등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법이다(【표 2】참조).

【표 2】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경제활성화 주요법안

(기준: 2016.05)

연번	법안명	발의/제안일	발의/제안자	내용	법안처리상태
1	중재산업진흥법	2015.11.05.	정부	국내기업이 외국의 국제중재 기관에 사건을 맡기는 경우가 많아, 법무부는 불필요하게 외화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국내 국제중재 시장을 만들기 위한 법안 제출	법제사법위 계류
2	스토킹방지법	2012.08.27. 2013.06.19. 2015.02.13	이낙연 김제남 남인순	스토킹을 동반한 데이트폭력 사전 차단하기 위한 법안	법제사법위 계류/ 남인순의원안은 특례법안임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2015.11.04.	홍일표	간통죄 위헌 판결 후 간통혐의 유죄확정 피고인들의 재심청구 급증. 재심청구 피고인 상당 수 무죄 판결 후, 형사소송법 440조에 의해 피고인 의사와 상관없이 이름/생년월일/직업/주소 등 신상정보 담긴 판결문 관보 공시. 개인정보보호 위해 관보공시관련 개정	법제사법위 계류

3.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은 일명 ‘신해철법’의 주요 골자는 의료기관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환자나 가족들은 병원이나 의사의 동의가 없어도 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의한 원격 의료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일회용 주사기 재 사용 시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화장품 품질 관리 강화를 통한 신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표 3】참조).

【표 3】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경제활성화 주요법안

(기준: 2016.05)

연번	법안명	발의/제안일	발의/제안자	내용	법안처리상태
1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신해철법)	2014.01.10. 2015.11.03.	남인순 김정록	의료사고발생시 의료기관·의사와 관련 없이 의료분쟁조정 시작	보건복지위 계류
2	화장품법 일부개정안	2014.10.16.	정부	한류열풍으로 수출이 늘고 있는 국산 화장품 품질관리강화를 통한 신뢰성과 경쟁력 제고	본회의 부의 안건(법사위 체계 자구심사 처리 2016.04.28.)
3	의료법 일부개정안	2013.05.03	심재철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계류상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대안 반영폐기
4	의료법 일부개정안	2014.04.02.	정부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의한 원격 의료 서비스 제공 허용	보건복지위 계류 (회부 후 논의 없음)

4.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은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특별법’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한도를 확대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있다. 행정규제에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고 행정규제를 현행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코스닥과 코넥스를 분리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이 있다.

【표 4】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경제활성화 주요법안

(기준: 2016.05)

연번	법안명	발의/제안일	발의/제안자	내용	법안처리상태
1	규제개혁특별법	2014.11.13.	김광림	네거티브 규제 방식(원칙적 허용, 예외 조항으로 금지) 도입	정무위 내 법안심사소위 계류

연번	법안명	발의/제안일	발의/제안자	내용	법안처리상태
2	은행법 일부개정안	2015.10.06	김용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한도 확대	정무위 계류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015.09.03	이진복	코스닥과 코넥스를 분리해 자본시장 경쟁력 제고	정무위원회 계류
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	2014.08.27	정부	행정규제에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 고 행정규제를 현행 포지티브 규제에 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정무위원회 계류

5.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요 주요 법안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법은 소위 노동개혁 4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고용보험법개정안’,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법’이다(【표 5】 참조).

【표 5】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경제활성화 주요법안

(기준: 2016.05)

연번	법안명	발의/제안일	발의/제안자	내용	법안처리 상태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2015.09.16.	김무성	2015.09.15. 노사정위원회 대타협 이후 발의한 노동개혁 5법 중 ‘기간제근로자 법’을 제외한 4법이 논의 중. 근로시간 단축, 실업급여제도 효율화, 통상적 출 퇴근 재해 보상 도입, 파견근로자에 대 한 기준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함	환경노동위 계류
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2015.09.16.	원유철		
3	산재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2015.09.16.	원유철		
4	파견근로자보호법 일부개정안	2015.09.16.	이인제		

6. 기타 위원회

기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는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고, 국회운영위원회에는 국회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 추진시 재원 조달 방안도 동시에 마련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일명 ‘페이코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개발된 기술정보를 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하게 하는 ‘기술이전·사업화촉진법’이 있다(【표 6】 참조).

【표 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경제활성화 주요법안

(기준: 2016.05)

위원회	법안명	발의/ 제안일	발의/ 제안자	내용	법안처리상태
교 문 위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2014.04.30.	김희정	저출산으로 학령인구 감소 가 시작된 상황에 대학의 정원을 미리 줄이는 내용 으로 2023년까지 총 16만 명의 대입정원 축소	교 육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계 류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2015.10.23.	안홍준		
국 회 운 영 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9.11.	이한구	일명 ‘페이고 법안’ 으로 국회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 추진 시 재원 조달 방안도 동시에 마련하는 것을 의무화	국 회 운 영 위 원 회 계 류
산 자 위	기술이전·사업화촉진법	2015.07.21.	장윤석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개발된 기 술정보를 산업기술진흥원 에 등록	법사위 계류(전 체회의 상정되 지 않음)